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

-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하여

백용기 (강남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4.27 이전의 남북한 관계
- III. 독일 통일 전개 과정
- IV. 독일 통일 이전의 사회문화적 교류
- V.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1>

* 이 논문은 2017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ABSTRACT •

Implications of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Prof. Baig, Yong Gi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 of Korean reunification through the story of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Looking at the side effects have been obtained from a radical German reunification, the problem of two Koreas is the inherent mutual hostile emotion and disparate mind system.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s of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equalization,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system, Koreans must put up with the quality of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Korean people should develop solidarity as partners jointly that is the initiation of the change of both Koreas. Considere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long and bumpy road. Therefore, internal integration, like German, is necessary for both Korea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Koreans as they develop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Key words: Reunification, Social Culture, Relation, Peace, Visit,
Inner Integration

I. 들어가는 말

독일 통일 30년이 다가 온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동, 서독은 계속된 교류를 통해서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아왔으며, 다가온 통일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본 논문은 독일 통일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통일 이후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한반도의 통일과 거기에 이르는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의 관계는 70년 동안 분단이 고착화되어 왔으며,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아직까지도 깊게 드리우고 있다. 가장 인도적이고 인간 삶의 기본적인 관계인 이산가족간의 만남조차도 쉽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한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일인 지배하의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오랜 기간의 군사정부 지배 아래서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하며, 전자는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후자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삶의 모든 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우리와 비슷한 분단의 경험과 상이한 체제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서독 정부의 내각이다. 서독의 모든 내각은 연합 내지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정권을 초월하여 통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동독과의 관계에서 통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양 독일 관계에 있어서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반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남한 정부의 대 북한 대응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굴곡이 매우 심하였다. 대체로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류를 통한 평화 정책을 중요시하였으나, 그 외의 정부에서는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통적인 북진 통일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여,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핵전쟁 위협과 전쟁 시나리오는 그 동안의 불신과 북한 핵무기 완성이 나온 최악의 대결국면이며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2018년 4월 27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미래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여 진다. 그 동안의 대결구도에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과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아직은 살얼음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분명 희망적인 일이다.

한편 독일 통일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요즈음 통일 논의에서 이 용어가 냉전적인 동서독 대결구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한 서독 체제가 동독을 흡수했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어 최근에는 이 용어 사용을 피하고 있다. 독일은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도 없다. ‘합병’이나 ‘병합’으로 번역될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Annektierung’이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주체적인 노력을 도외시한 것이며, 그들이 평화로운 시민 혁명으로 얻은 자유선거에 의해서 채택한 통일 조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체제 대결의 승리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이 용어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북한 체제 붕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의 역량을 고려할 때 남한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¹⁾

1) 안성찬,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2”, 『독일언어문학』 제74집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 자주 사용되는 ‘사회 통합’, ‘사회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등의 개념이다. 독일 통일에서 사용된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은 동서독 경제체제 통합, 즉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의 한 부분인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나 ‘사회문화적 통합’은 사회학적 용어로 결혼 이주자나 노동 이주자, 탈북자 등이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개념은 이질성을 극복하는 ‘사회 문화적 균질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균등이나 사회적 균질화’를 의미하고, 체제 고착화에 따르는 이질화된 사고방식, 생활양식을 통합하는 개념으로는 ‘내적 통합’ 또는 ‘내적 통일’(innere Einheit)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 본 논문에서는 ‘내적 통합’을 사용하고자 한다.²⁾

이러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위해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즉 독일 통일을 되돌아보고, 남북한의 지금까지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통일에 이르는 길은 긴 시간과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쪽의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거나 대체하게 될 때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비록 정치, 경제의 형식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경제적 균등이나 사회 통합, 더 나아가 문화, 심리적 통합은 더욱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 및 정신적 가치는 정치, 경제 체제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 북한 모두는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는 교류를 통한 단계적 접근 방법이 요청된다. 먼저는 교류에 의한 신뢰 구축이요, 다음으로는 남북 연합이나 국가 연합, 또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체제 변혁(Aufhebung)에 대한 노

(2016.12), 93-95.

2) Ibid., 96-98.

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서로간의 ‘문화 간 감수성’을 통한 접근이다.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민족 상대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은 분단 이전의 공통되고 공유되어 온 문화유산들이 있다. 그러기에 호스트 문화에 적응해가는 문화 적응 과정과는 다르지만 관점의 측면에서는 유용하다.³⁾ 또한 신학, 윤리적 측면에서 울리히 바흐(Ulrich Bach)의 은유적 개념인 “상호 내려감”(Miteinander-unten-Sein)의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⁴⁾ 그는 디아코니아를 “위를 향해 올라가는”(Nach-oben-Kommen) 과정이 아니라, 상호 내려감의 학습과정으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낮아짐 속에 현현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인식되어진다. 그는 디아코니아가 직면하는 “승리의 신학”(Triumph Theologie)을 “바알 신앙”이라 비판하면서 이를 비성서적이라 규정한다. 왜냐하면 바알 논리는 “힘”을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종교적 “신의 상”(Gottesbild)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알 논리에서는 손상을 입은 장애우는 국외자나 대상인 타자일 뿐이지만, “야훼 신앙”에서는 장애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다. 이 논리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는 장애우에게 연대적인 파트너 관계의 동료로서 다가오며, 이런 연대 속에서 교회는 강자, 약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⁵⁾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 질적 변화의 관계 속에서 남북

3) M. Bennett, *Basic concep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98).

4) Martin Horstmann, *Begleitbuch zum Studienbuch Diakonie*, DWI-INFO Sonderausgabe 8 (Heidelberg, 2007), 42.

5) G. K. Schaefer, “Evangelisch-theologische Konzeptionen und Diskussionslinien der Diakonie”, Guenter Ruddat/ Gerhard K. Schaefer(H.g), *Diakonie in der Gemeinde* (Goettingen: Vandenhoeck & Ruorecht, 2005), 91.

한이 서로 다가가는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4.27 이전의 남북한 관계

그 동안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은 정권이 바뀔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박정희 정부의 북한과의 7.4 남북공동성명(1972. 7. 4)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일컬어지는 최초의 성명은 남북통일 원칙을 제시한 기본 방향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후 발표 한 6.15 선언(2000. 6.)은 평화통일 방안과 통일국가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 회담 후 발표한 10.4 선언(2007. 10. 4)은 6.15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정상 간의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만이 아니라, 남한 정부의 중요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태우 정부의 “7. 7 선언”(1988), 뒤이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199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 남북기본합의서, 1991) 체결 등 이 시기는 ‘남북협력의 시대’라 일컬음만 하며, 이 시기에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이 정립되었다. 7. 7. 선언은 국제적인 화해 무드 속에서 “자주, 평화, 민주, 복지”라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1)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2)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3) 남북 간 교역 개방, 4)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반대, 5) 남북 간 대결 외교 지양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6)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개선,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의 6개항의 정책을 통해 사회, 문화,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적대 세력으로서의 북한을 화해와 협력 대상으로 인정하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

도해 가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후의 통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특별 연설에서 남북교류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7. 7. 선언이 ‘화해협력’에 방점이 있다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연합’이 핵심이다. 7. 7.선언 이후 대북 비난 방송 중지나 대북 경제 개방 및 경제인 상호방문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 쌓아갔다. 이 방안은 남북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고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첫 단계인 화해협력은 분단을 인정하면서,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위협과 상호 적대감 해소가 중요하다. 남북 연합의 단계는 통일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이것은 서독이 통일과정에서 제시한 ‘국가 연합’도 아니며, 북측의 ‘연방제’도 아니며, 남북이 각각 주권국가이지만 국제법상의 독립국가도 아니다. 이 단계는 남북 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담, 남북공동사무소 같은 기구를 통해서 운영된다. 마지막 ‘통일국가’는 통일 헌법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여 두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방안은 학자들의 모호한 이론이며, 실천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남북협력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7. 4. 남북공동 성명서에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전문에 명시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은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남북의 교류협력에 대한 중요한 정책들이다. 단계적 통일 방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후유증을 생각할 때 지극히 합리적 방안이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평화 우선 정책과 맞닿은 정책들이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으로 시작된 북미 간의 전쟁 소동을 겪은 작금의 상황 속에서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노태우 정부의 일련의 선언 등은 그 이후 실질적인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계속되는 통일 정책에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6. 15선언은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끝낸 후 남북 정상 간의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이다. 두 정상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합의를 선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1.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2.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3.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 4.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며”, 5.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 등이다. 곧 실무를 위한 후속 회담이 이어졌으며,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공사가 착수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가 개방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10. 4 선언은 6. 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통일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한반도내 전쟁 반대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강화,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종전 선언 추진, 남북경

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 합의, 민족문화 교류, 협력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외동포를 위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10. 4 선언은 곧바로 정권이 바뀔으로써 큰 실효를 가져오지 못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2018년 4. 27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은 통일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남북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체제 우위의 흡수통일이 잠재되어 있는 통일 방안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 협력 우선정책이 북한의 호응과 더불어 나름대로 교류와 대화의 장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이어 받아 통일 우선정책에서 평화 우선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의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북미간의 직접 대결로 전이됨으로써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결국면에서 대화로의 방향은 틀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진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III. 독일 통일 전개 과정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이 출범하였으나, 완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었다.⁶⁾ 서독은 1955년 파리조약을 통해 전쟁 승전 연합국으로부터 주권이 회복되었다. 동서독 관계는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악화되었으나, 국제관계는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넘긴 이후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통일보다는 자유’(Freiheit vor Einheit)를 우선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의 정부는 동독을

6) 1949년 9월 21일 발효된 점령규약에 의해 독일에는 미, 영, 불의 군대가 주둔하고 외교관계 수립이 제한되었으며, 군대보유가 금지되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⁷⁾ 동독은 계속적으로 공식적인 국가 인정을 요구하였다. 긴장 완화가 진행되면서 서독은 동독과 교류를 실시하면서 동독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대우하였다.⁸⁾

베를린 시장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그의 외교정책 자문인 에곤 바르(Egon Bahr)는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의 동독에 대한 정책은 ‘작은 단계의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이었으며, 바르는 1963년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rung)라는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슬로건을 투칭(Tutzing)의 연설에서 언급하였다. 즉 “공산국가는 스스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접촉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은 외교정책의 문제로 오로지 소련과 함께 추진해야만 이를 수 있고, 동독정권을 직접 붕괴시키려는 정책은 가망이 없으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완화는 오로지 동독과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

아테나위는 1966년 “소련을 평화를 원하는 강대국”이라며 주목할 만한 연설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독일의 분단은 국제적 긴장 관계에 의한 것이며, 긴장 해소가 재통일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열쇠가 모스크바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서독 수상인 키징어(Kurt-Georg Kiesinger)는 국제법 인정

7) 서독은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어떤 나라(소련 제외)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Doktrin)을 따랐으나, 1967년 기민련(키징어)과 사민당(브란트)의 대연정에 와서 궁극적으로 폐기되었다. Horst Mueller, “통일 전 동서독 관계 - 긴장완화정책 수행기의 동, 서독관계”, 통일부, 『제8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서울: 통일부, 2018. 10. 04-05), 47.

8) 1963년 이산가족과 연금생활자들의 방문이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도록 한 “통행증협정”(Passierscheinabkommen)이나 서독 정부가 몸값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비밀리에 데려오는 “최수석방금”(Haefitlingsfreikauf) 등을 들 수 있다.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에 구금된 정치범의 1/3이 몸값을 내고 석방되었다. Michael Hollmann, “긴장완화정책 이전 동서독 관계 - 통일 전 동서독 관계”, *ibid.*, 36.

9) Egon Bahr, *Zu meiner Zeit* (Muenchen: Karl Blessing Verlag, 1996), 152-161, 통일부, 『외교분야에 관한 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 19』 (서울: 통일부, 2016. 06), 64 재인용.

없이 처음으로 동서독 간에 “인간 고통완화”(menschliche Erleichterung)에 관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였으며, 1967년 서독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동독 수상 슈토프(Willi Stoph)에게 편지의 답신을 보냈다.¹⁰⁾

사민당은 1969년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브란트는 “신동방정책”의 방향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서독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두 개의 국가를 공식 성명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며, 상호 관계는 다만 특별한 성격의 관계일 수 있다”고 하였다.¹¹⁾ 또한 1970년 서독과 소련이 체결한 모스크바 조약은 유럽에 평화질서의 길을 열었다. 이 조약에서 서독은 “독일을 위한 서한”에서 독일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밝혔다. 여기서 서독은 “상호병존”(Nebeneinander)에서 “상호공존”(Miteinander)의 길로 들어서며, 1973년 동, 서독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¹²⁾

1975년 헬싱키의 “유럽안보협력회의”(KSZE)는 긴장완화의 정점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평화질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특히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 I)이나 탄도 요격미사일(ABM)의 군비축소는 큰 진전을 가져왔다. 서독의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과 동독의 국가평의회장 호네커(Erich Honecker)에게는 군축문제가 공동의 관심사였다. 그들은 냉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긴장관계와 군사적 중무장”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협정은 상호접촉과 국경을 넘는 소통 그리고 두 사회 간의 관계 실현 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서유럽을 위협하는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무장으로 관계가 다시 긴장되었다. 여기에 대응하여 나토(NATO) 위원회는 슈미트 수상이 발의한 협상과 무장을 동시에

10) Horst Mueller, “통일 전 동서독 관계 -긴장완화정책 수행기의 동, 서독관계”, 51.

11) 통일부, 『외교분야II 관련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 19』, 65.

12) Horst Mueller, “통일 전 동서독 관계-긴장완화정책 수행기의 동, 서독관계”, 51, 53.

진행한다는 “이중결정”(Doppelbeschluss)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 안은 브란트를 비롯하여 서독 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관철시킬 수 없었으나, 1982년 수상에 오른 콜(Helmut Kohl)에 의해 1년 뒤에 서독에서도 관철되었다.¹³⁾

서독은 정권 교체에도 동서독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새 정부는 체결된 협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선언을 하였으며, 실제 지도층 정치가들의 동독인과의 접촉은 몇 배 더 늘었다. 그리고 동독과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문도 있었다. 특히 보수적인 바이에른 주정부 수상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는 1983년 동독에 수십억 마르크를 비밀리에 대출해 주기로 합의하여,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가 차관을 제공한 것은 “동독의 경제적인 종속”을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하여튼 서독의 모두 정부들은 국제법적으로 독일의 재통일에 대한 요구를 견지해 왔다.¹⁴⁾

1989년 9월 4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첫 시위가 열렸다. 약 1,200명의 참여자가 기도 모임을 마친 후 ‘국외여행 자유와 슈타지(Stasi: 국가 안전 기획부) 축출’을 요구하였으며, 이 시위는 드레스덴 등을 비롯한 대도시로 전파되었다.¹⁵⁾ 10월 9일에는 약 7만 5천명 시위대가 “우리는 이곳에 남는다.”(Wir bleiben hier)와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촉구했다. 에곤 크렌츠(Egon Krenz)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나 11월 4일 약 70만 명이 동베를린의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여러 도시에 시위가 이어졌다.¹⁶⁾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

13) Ibid., 56-57.

14) Ibid., 58.

15) 손선홍,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통일부, 『외교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통일 총서 18』 (서울: 통일부, 2016), 22. 동독 교회의 평화기도 모임은 1982년부터 주기적으로 열렸다.

16) Ibid., 23.

다. 그러나 이것을 독일 통일의 시작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¹⁷⁾ 이날 콜 총리는 폴란드를 방문 중이었으며, 다음날 본으로 돌아 온 콜은 전승 4개국 정상들에게 베를린의 안정을 요청하였다.¹⁸⁾ 장벽이 무너지자 ‘독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콜은 동독주민의 평화 혁명을 계기로 통일의 주도권을 잡았다. 콜은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Zehn Punkte Programm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Deutschlands und Europas)’을 통해 통일 목표를 제시하였다.¹⁹⁾ 이는 동독의 개혁이 확고히 이루어진 후, 국가 연합을 거쳐 통일로 이르는 3단계 방안이었다. 그는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시간적 여유를 갖는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생각하였다.²⁰⁾ 그러나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에 그는 동독정권은 끝났으며,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민들의 급격한 증가와, 소련의 불안한 국내정세 때문이었다.²¹⁾

동독정부 역시 총선을 실시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통일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1990년 3월 18일의 총선에서 서독 기본법 제23조(독일의 기타 지역에는 연방에의 가입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에 의한 통일

17) 서독과 동독의 외교정책문서를 통해서 보면 1989년과 1990년 미국, 소련 그리고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독일문제’를 대하던 방식에서도 독일통일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게다가 미국을 제외한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독일 통일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독 정보기관도 예상하지 못했다. Richard Kiessler / Frank Elbe,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Nomos, 1993), p.45, 손선홍,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25 재인용.

18) 손선홍,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24.

19) “Protokoll der 177.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28. November 1989”, *ibid.*, 28 재인용.

20) 그것은 갑작스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준비의 부족과 전승 4개국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ibid.*, 29.

21) *Ibid.*, 37.

을 주장하는 ‘독일연합’이 승리하였다. 동독에서는 동독 기민당을 중심으로 대연정이 구성되어 4월 12일 기민당 대표인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는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빠른 시일 내의 통일과 통일된 독일의 NATO 잔류를 주장하였다. 또한 서독 기본법 116조는 “이전 독일 제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독일인들이 공통으로 동일한 국적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동, 서독의 통일 방안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으며,²²⁾ 독일의 통일이 흡수 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선택과 동독과 서독의 합의에 의한 통일의 주장이 여기에 있다.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계속하여 추구해 왔으며, 동, 서독 주민의 다양한 접촉을 유지해 왔다. 동독은 1989년 말까지 통제와 감시로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72년부터 이루어진 수많은 협정들은 여행, 이산가족 상봉, 그 밖의 다양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게 하였다. 동독 내에서 서독의 라디오와 TV 수신은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으며, 정치적 분단 속에서도 동, 서독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속적인 긴장완화 정책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국제법상으로 재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와 소련의 몰락은 1989/90년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동독의 평화 시민운동은 국제외교를 자극하여 평화로운 재통일을 이루어 내었다.²³⁾

IV. 독일 통일 이전의 사회문화적 교류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교류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 많은 사회 문화적 교류를 하였음에도

22) Ibid., 39.

23) Horst Mueller, “통일 전 동서독 관계-긴장완화정책 수행기의 동, 서독관계”, 63.

불구하고 통일 이후 일상 생활에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인들은 분단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독일인들의 사회 문화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교육과 문화 향유를 위해 시민대학운동이 활발하였다. 그래서 분단 전의 독일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하게 문화적 기회가 제공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동부를 점령한 소련군은 건국된 동독 주민들에게 문화생활과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였다. 특히 문화와 예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인간”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⁴⁾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구현은 동독 건국 이전 소련공산당에서 “1928년 사회주의적 인간형과 사회주의적 현실주의”²⁵⁾를 문학, 미술, 음악의 기본지침으로 삼았다.

동독에서의 문화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었으나, “예술적 아이디어는 정치적 투쟁의 진행노선”을 따라야만 했다. 통일사회당(SED)의 당 서기였던 에리히 호네커는 문화 예술이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에 어긋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사회주의에 해를 끼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라 하였다.²⁶⁾ 동독에서 문화는 “사회주의 기반”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사회주의 문화는 평화, 휴머니즘, 사회주의적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반면에 “제국주의적 문화”는 “심리적 전쟁과 인간멸시”에 공헌한다.

동독의 지도부에게는 모든 예술 영역에서 이적 행위가 퇴치되어야 했

24) 이은정/알렉산더 페니히,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문화”, 통일부,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21』 (서울: 통일부, 2017), 72, 75.

25)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는 추상화, 미화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접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주의적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 보건, 도시계획, 주택보급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문화는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ibid.*, 76.

26) *Ibid.*, 77, 79.

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반사회주의적 사고, 이론, 개념 등 다양한 형식의 적대행위를 악용”하는 내, 외의 적들을 경계하였다. 연극은 “새로운 국가와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 그래서 동독문화부는 모든 예술극장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모든 첫 공연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²⁷⁾ 에리히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해(1988)에 “동독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만들어 소련에 대한 동독의 자립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서독의 동독과의 문화협정은 1972년에 조인된 기본협정서에 의한다. 성과 없이 10여년을 보낸 후(1983년) 다양한 문화 영역, 즉 미술, 문학,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문화재 관리,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청소년, 체육 등 대략 100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동독 지도부는 소련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독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1983년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에 동독의 교회와 국가 대표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하였다. 1986년 3월 헬무트 콜 수상은 “분단된 독일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동, 서독의 문화 발전에 대해서 연설하였다. “역사와 문화, 정체성 추구, 국가조직은 독일 민족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일 문화는 모든 독일인이 하나라는 공통의 감정을 갖게 해주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독일인은 공동의 문화를 의식하고 그것을 함께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괴테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미술에서 문학, 음악, 교육, 학술, 문화재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협정을 중착점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27) Ibid., 80.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극적인 독일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서술과 해석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에만 역사는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만들어 줍니다. 언어, 문화, 법, 종교, 가치, 전통 등은 한 민족의 기억을 위한 변명될 수 없는 분명한 증인입니다.”²⁸⁾

1986년 5월 동서독 간에 문화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1973년부터 준비된 결과이다. 서독과의 문화교류는 동독 지도부에게 근심거리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동독사회에 서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동독의 개혁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개혁정부의 문화영역에 “시장 경제적 기준”의 배제를 요구하였으며, 문화국가 구축을 위해 문화의무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⁹⁾ 1980년대 동독의 많은 예술가들이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탈중앙화된 문화 예술을 위해 저항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그들은 오히려 장래의 동독 문화에 대해서 우려하였다.³⁰⁾ 동독의 반체제 저항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세력 중에 문화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기대도 높았으나 독일 통일 이후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도 컸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통일 이후에는 현실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또한 문화의 상품화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반면 서독의 여러 문화 단체들에게는 문화예술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³¹⁾ 1989년 12월 12일 동서독의 공동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독의 문화부장관은 13개항 조항

28) Ibid., 83f.

29) Ibid., 86.

30) 문화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자 예술가협회 선언문에 대한 입장, *ibid.*, 90.

31) Ibid., 92.

을 제안하였는데, 문화 예술을 통일과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건물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³²⁾

V.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한 독일 통일의 시사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을, 특히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체제가 다른 남북한의 정치, 경제가 가져온 노동 환경의 변화다. 급작스러운 통일로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된 동독의 노동시장과 대량 실직에 의한 실업, 뒤따르는 서독으로의 이주와 불안, 무기력 등의 후유증은 독일 통일이 지난 지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노동이 헌법으로 보장되었다(제24조). 동독 주민에게 노동은 사회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원천이었으며, 거기에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³³⁾ 물론 서독에서도 노동은 자아실현의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독에서의 노동은 노동의 성과와 즐거움, 사회적 성공을 중요시하는 서독과는 다르게 노동의 윤리적 차원이 강조되며, 집

32) 동서독 문화위원회 2차 회의 중 동독 문화부장관의 발언, *ibid.*; 1989년 동독의 시민혁명에서 도시 구도심의 폐허화가 큰 문제였다. 역사적인 구 도심지의 재생문제는 동독의 건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당연히 체제비판이었다. 도시 구도심의 문제는 당시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요소였다. 이것은 지역 문화재, 옛 건축물은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그 동안 대거 철거되었기에, 도시들이 자신의 얼굴을 잃어 버렸다고 보았으며, 주민들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폐허화와 철거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동독 시민에 고향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와 공도예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ibid.*, 89.

33) 박희경, “독일 통일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갈등”, 『독일문학』 제95집 (2005, 9), 194.

단을 위한 희생과 개인의 사회적 성취가 담겨 있었다.³⁴⁾

동독은 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 고용이 이루지지 때문에, 실업이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비효율성도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서방으로 개방됨에 따라 기업 파산과 그에 따른 실업은 수백만 동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어 놓은 대 사건이었다. 통일로 인해 동독의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화폐 통합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상실은 산업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고용 시장은 불안으로 바뀌었다.³⁵⁾

통일 직전 (1990. 9) 동독의 실업자는 361,000명이었으며, 150만 명이 단축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 수많은 잠재적인 실업자가 있었다.³⁶⁾ 통일 이후에도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매년 서독 지역의 거의 2-3배 수준을 기록한다. 이들에게 실업은 경제적 문제 이상이었으며, 정서적 심리적 좌절을 가져왔다. 이것은 동서독 주민의 내적 통합을 어렵게 하였으며, 각종 사회 보장 비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실업의 만성적인 상태는 여성과 노령 인구를 노동 시장에서 퇴출시켰으며, 노동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주민들의 삶과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체제 전환에 따른 노동력 공급 실패, 고용 지원자의 정상 취업의 저조함 등은 지원이 만료된 후 지원 대상자들을 다시 실업 상태나 고용 지원 대상으로 회귀하게 하였다.³⁷⁾ 따라서 지금도 독일의 계속된 과제는 높은 재정 부담과 구서독으로의 부의 집중 현상, 이로 인한 실업률 등 전반적

34) Ibid., 195.

35) 박명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통일부, 『노동 실업 분야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 14』 (서울: 통일부, 2016), 20, 26.

36) 이은정/베르너 페니히,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노동”, 통일부, 『노동 실업 분야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14』 (서울: 통일부, 2016), 96.

37) 박명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27, 44.

인 고용의 격차이다. 이로 인한 구동독지역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며, 인구 감소와 두뇌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량 인구 이동은 앞으로 남북한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문제다. 현재에도 남한 내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동으로 인한 북한 경제의 혼란과 남한 지역의 단순 노동력 공급 과잉 및 주거 문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³⁸⁾

독일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 지역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서독으로의 이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 기회 확보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들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의 자연 인구 감소 및 순유출, 농촌 지역 및 구조가 취약한 도시 인구의 감소 등이다.³⁹⁾ 동독 지역 내의 격차는 최근 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통일 후 자본의 유출의 유, 무로 인한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⁴⁰⁾ 급격한 인구 이동의 결과로 전문 노동력이 감소하며,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기업 유치가 어려워 기업의 소형화, 이는 다시 R&D나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생활만족도(amenity)가 낮아지고 인구를 유출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이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⁴¹⁾ 이러한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 새로운 가치 체계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 실업에 대한 공포, 상대적 박탈감,

38) 김창권,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36권 2호: 제83집 (2018, 6), 2.

39) Ibid., 1.

40) ‘독일 통일 새롭게 보기’, 『프레시안』 2018년 5월 28일자.

41) 동독의 1인당 GDP가 통일 25년이 지난 2015년에 서독대비 약 67%에 머문다, 김창권,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3.

낮아진 삶의 만족도 등은 독일의 내적 통합을 저해하며, 통일 독일 시민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을 떨어뜨린다.⁴²⁾

독일은 통일 직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사회 경제적 충격 요법으로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동독의 경제는 1990년 전반기부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7월 1일 이후 급속히 붕괴되어 통일이 완성될 시점에는 이미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 3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다행히 서독식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큰 동요와 불안 없이 통일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다.⁴⁴⁾ 실제 통일 비용의 약 60%가 사회정책을 위한 비용이었다.⁴⁵⁾ 이러한 서독식의 사회정책적인 제도 없이는 정치적, 사회적 충돌이나 저항 없이 독일 통일의 완성이 불가능했을 거라 한다.⁴⁶⁾ 특히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는데, 이는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회부조제가 아니라 일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안정화였기 때문이다.⁴⁷⁾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주민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서독과 동독의 과도 정부와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화폐 통합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화폐 통합이 독일 통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

42) 양계민, “통일 이후 독일 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 89.

43)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통일부, 『사회복지 연금분야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13』 (서울: 통일부, 2016), 138.

44) 윤석명/류재린,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 보장제도와 연금제도의 통합과 평가”, 통일부, 『사회복지 연구분야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13』 (서울: 통일부, 2016), 13.

45)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129.

46) Gerhard A. Ritter, 『독일통일의 가격, 통일과 사회복지 국가의 위기』, (Muenchen: C.H. Beck, 2007),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130 재인용.

47) 박명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43.

이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동독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후 서독 마르크화로 통합해야 화폐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단계적 통합론이 우세하였으나, 이 방법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 물결을 차단하는데 역부족이었다.⁴⁸⁾ 실제 화폐 통합 이후 서독으로의 탈출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마르크화의 전면 도입으로 동독 경제는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 완충 장치 없이 곧바로 내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동독 경제는 곧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서방 기업과의 경쟁에서 동독의 기업은 견디지 못하고 무더기로 도산되었다.⁴⁹⁾ 동독 주민의 임금이나 연금, 그리고 소규모 은행 예금은 1:1로, 채권이나 채무는 2:1 비율로 화폐를 교환했다. 7월 1일 화폐 통합 발효와 함께 독일은 단일 경제권이 되었다. 이것은 만일 환율이 다르게 적용되면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이탈을 막을 수 없어서, 사회 통합은 실패하고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⁵⁰⁾

내년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다. 그러나 통일 30년이 다된 지금도 독일 통일은 진행되고 있다. 동서독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간격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크다.⁵¹⁾ 통일 초기의 엄청난 재정 투입에

48) 통일 한국 편집부, “동, 서독 화폐통합 공과는?”, 『독일 통일 바로알기4』 (서울: 통일한국, 2010. 04), 28;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1차 국가조약, 즉 화폐통합을 위한 협상단의 서독 대표, 한스 티트마이어는 그의 회고록에서 협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회 통합을 뒤로 미루려고 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서독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1994년 출간된 그의 회고록에서 언급하였다. 티트마이어 회고록 1994, p.66,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134 재인용.

49) 통일 한국 편집부, “동, 서독 화폐통합 공과는?”, 29.

50) 윤석명/류재린,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 보장제도와 연금제도의 통합과 평가”, 15.

51) 베를린-부란데부르크 사회과학연구소센터가 2010년 구동독 주민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이 통일 독일 시민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구동독 시절로 가고 싶지도 않지만 통일독일도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주민들이 59%, 9%는 구동독 시절로 가고 싶다고

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후유증은 계속된다. 서독 역시 증가된 세금부담⁵²⁾과 동독 이주민으로 인한 주택 및 범죄 문제 등 사회적 불안에 불만이 존재한다.⁵³⁾ 통일 이후 동독인이 겪는 새로운 문제는 집 문제이다. 동독에서 집은 국가의 보급 대상이었고, ‘일단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었다. 집은 결혼을 해야 주어졌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하는 경향이였다. 자녀가 많으면 더 큰 집이 제공되었다. 이들에게 통일 후 생활환경에서 아쉬운 점은 구동독 시절의 공동체 개념의 상실이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 등의 문화도 사라지고, 모두가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며, 사회적 유대를 그리워한다.⁵⁴⁾

사실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와 자유를 바란 것이 통일이 아니었다. 장벽 붕괴 후 1년여가 돼서야 통일 구호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동독 체제의 붕괴는 예상했지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1990년 3월 18일 열린 자유선거가 끝난 후였다고 한다.⁵⁵⁾ 동독의 시민 혁명은 이렇게 자유를 위한 운동에서 통일을 위한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통일은 기대하지 않는 일이었으며, 동독은 통일당한 것이다.⁵⁶⁾ 그래서 동독에서는 통일을 전반적으로 부끄러워한다. 자기들의 것을 잃어버리고 ‘제2의 시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⁵⁷⁾ 통일 후 구동독의 상당수는 서독 출신이 장악하

했다, 이해정/조호정, “독일 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현대경제 연구원, 『통일경제』 제2호 (2015), 58.

52) 통일 당시 구동독 지역의 재건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통일 비용 총당의 재정비용이 증가하였다. 처음 예상은 독일 GDP의 1.5%였으나 1991년에서 2003년까지 평균 GDP의 4%가 지출되었다, *ibid.*, 56.

53) 양계민, “통일 이후 독일 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82.

54)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이야기 3’, 『프레시안』 2018년 10월 09일자.

55) ‘동독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2’, 『프레시안』 2018년 10월 08일자.

56)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이야기 3’.

57) ‘세계공관점 유디트 앤더스 활동가 7’, 『프레시안』 2018년 10월 14일자.

였으며, 실제로 서독 출신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의 80%를 차지한다.⁵⁸⁾

독일 통일에서 교회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 1980년대부터 시민 저항운동은 1989년 9월 25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Nikolaikirche)를 중심으로 8천여 명의 시민이 “월요 시위”를 폭발시켰다. 한 달 후 7만 명으로 반체제 집회가 퍼져 나갔다.⁵⁹⁾ 교회가 반체제의 중심점이 되었기에 동독 정부는 슈타지를 교회에 보내 감시하였다. 교회는 특별한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가족 같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다. 구동독 시절의 교회가 통일 된 지금보다 두 배의 사람들이 다녔다. 통일 운동의 주도자들 절반 이상이 교회나 환경운동가들이었다. 그래서 동독 정부는 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⁶⁰⁾ 사실 유럽에서의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며, 삶의 방식이며 문화이다. 동독이 사회주의를 채택했지만 기독교를 단절시킬 수는 없었다. 북한의 기독교인이 대거 남한으로 탈출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동독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들은 동독 당국에 매우 거북스러운 존재였다. 이것은 독일 통일 시기에 일어난 동독의 민주화 운동에 교회가 중심인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시(Klaus Gysi)에 의하면 유럽 역사상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는 진보적, 인도주의적, 혁명적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⁶¹⁾ 독재에 반대하는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이들은 동독식의 공산 독재도 거부하고, 착취에 기반 한 서독식의 자본주의도 거부한 제3의 길을 찾고 있었다.⁶²⁾

58) '뤼디거 프랑크 비엔나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2018년 10월 22일자

59) '동독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2'.

60) '동독 1020세대가 기억하는 독일의 재통일 5', 『프레시안』 2018년 10월 11일자.

61) Frederic Hartweg(H.g), *SED und Kirche*, (Neukirchen-Vluyn 1995), Vorwort III, 김충완, “동독의 초기와 중기 역사 발전 단계(1946-1970)에 나타난 교회 정책”, 『독일어 문학』 제63집(2014, 3), 1 재인용.

62) '아우가 훔볼트 대학교 교수 9', 『프레시안』 2018년 10월 17일자.

VI. 나가는 말

1991년 남북한의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추진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 사업 등이 중단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7월 신베를린 선언은 앞 선 정부의 통일 우선정책이 아니라, 평화 공조가 대북 정책임을 알리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지 않고, 흡수 통일을 지양하며, 평화적 공존공영과 장기적 통합의 대비가 필요함을 밝혔다.⁶³⁾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은 정부 합의서 발표나 선언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상호 신뢰를 확대하며 공존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더 나아가 남북 교류를 자치 단체, 각 부분별, 분야별로 확대하며, 자매결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독일을 통한 학습은 형식적 통합으로는 분단체제에서 이질화된 삶의 방식과 사고 체계가 쉽게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교류를 하면할수록 이질성이 더욱 드러날 것이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내재된 '상호 적대적 타자성'을 극복해야 한다. 다름 속에서 더 큰 갈등과 충돌을 이겨내는 평화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하며,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의지는 만날수록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이제 독일 통일 과정과 통일 독일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을 거울삼아, 남북한의 내적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남북한의 다른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남한의 시장경제의 통합에서 발생할

63) 김창권,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0.

64) ‘독일 통일 새롭게 보기’, 『프레시안』 2018년 5월 28일자.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호 접근 가능한 유연한 체제를 중심으로 질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은 형성되기 시작한 자생적 ‘장마당 시장’을 확대시키며, 남한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남북한 상호 협력하여 최근 합의한 남북한 철도, 도로 사업이나 남북 공동의 경제 특구 확대, 농어촌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및 주거 환경 개선, 각급 교육기관이나 학교 자매결연, 공동연구, 문화 단체 교류나 다양한 활동 등이 요청된다. 독일 통일 부작용의 대부분이 통일의 급작성에서 생긴 것을 볼 때에 남북한 통일 과정은 점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성과가 일자리에 달려 있었던바, 남북한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한의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의 노동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합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 즉 실업대책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정책의 담당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제3세대동독’(Dritte Generation Ostdeutschland)이라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다. 청, 소년 시절에 통일을 겪은 이들(1975-1985 출생자)은 성년이 되자마자 새로운 체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다. 이들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의 실질적 주체가 되었다. 동년배의 서독인과의 차이도 이전의 동독인과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이 ‘오스탈기’(Ostalgie= Ost + Nostalgie)로 표현되는 집단적 자기 정체성이다. 이것은 성찰적 노스텔지어로서 일종의 지역, 문화 정체성이며, 긍정적 자기 인식이다. 독일 주류 담론에서 배제된 동독의 이야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이다. 비정상체제요 통일의 대상이었던 동독 주민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인식해 가는 과정이다. 그들은 말한다: “북한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 풀도록

36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남한이 기다려야 한다.“⁶⁵⁾

65) '슈타지 역사 기록소의 리히터 씨 4', 『프레시안』 2018년 10월 11일자.

참고문헌

- 김창권,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36권 2호: 제83집 (2018, 6). 1~28.
- 김충완, “동독의 초기와 중기 역사 발전 단계(1946-1970)에 나타난 교회 정책”. 『독일어문학』63집 (2014, 3). 1~24.
- 통일 한국 편집부. “동, 서독 화폐통합 공과는?”. 『독일 통일 바로알기4』. 서울: 통일한국, 2010. 04.
- Horst Mueller. “통일 전 동서독 관계-긴장완화정책 수행기의 동, 서독관계”. 통일부. 『제8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서울: 통일부, 2018. 10. 04-05.
- 박명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통일부. 『노동 실업 분야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 14』. 서울: 통일부, 2016.
- 박희경, “독일 통일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갈등”. 『독일문학』 제95집 (2005, 9). 189~209.
- 손선홍, “동독주민의 평화혁명과 통일 추진”. 통일부. 『외교분야1 관련 정책문서: 독일 통일 총서 18』. 서울: 통일부, 2016.
- 안성찬,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2”. 『독일언어문학』 제74집(2016. 12). 87~105.
- 양계민, “통일 이후 독일 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 81~114.
- 윤석명/류재린,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 보장제도와 연금제도의 통합과 평가”. 통일부. 『사회복지 연구분야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13』. 서울: 통일부, 2016.
- 이은정/알렉산더 페니히,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문화”. 통일부.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21』. 서울: 통일부, 2017.
- 이은정/베르너 페니히,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노동”. 통일부. 『노동 실업 분야관련 정책문서-독일 통일총서14』. 서울: 통일부, 2016.
-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정책(연금)”. 통일부. 『사회복지 연금 분야 정책문서-독일 통일 총서13』. 서울: 통일부, 2016.
- 이해정/조호정, “독일 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현대경제 연구원. 『통일

경제』 제2호 (2015). 50~59.

Michael Hollmann, “긴장완화정책 이전 동서독 관계 - 통일 전 동서독 관계”. 통일부. 『제8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서울: 통일부, 2018. 10. 04-05.

Bennett, M. *Basic concep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98).

Horstmann, Martin. *Begleitbuch zum Studienbuch Diakonie*, DWI-INFO Sonderausgabe 8. Heidelberg, 2007.

Schaefer, G. K. “Evangelisch-theologische Konzeptionen und Diskussionslinien der Diakonie”, Guenter Ruddat/ Gerhard K. Schaefer(H.g), *Diakonie in der Gemeinde*. Goettingen: Vandenhoeck & Ruorecht, 2005. 91.

‘독일 통일 새롭게 보기’. 『프레스시안』 2018년 5월 28일자.

‘동독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2’.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08일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이야기 3’.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09일자.

‘슈타지 역사 기록소의 리히터 씨 4’.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10일자.

‘동독 1020세대가 기억하는 독일의 재통일 5’.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11일자.

‘세계관점 유디트 앤더스 활동가 7’.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14일자.

‘아우가 훔볼트 대학교 교수 9’.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17일자.

‘뤼디거 프랑크 비엔나대학교 교수’. 『프레스시안』 2018년 10월 22일자.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11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2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11일

• 국 문 초 록 •

독일 통일에 대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남북한의 내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의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특히 급진적인 독일 통일이 가져온 후유증을 보면서 그동안 남북한의 내재된 상호 적대적 감정과 이질화된 사고 체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통합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다. 통일의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균등화나 정치 사회적 통합, 문화적 공유는 상대 체제에 대한 자신의 질적 변화를 감수해야 하며,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속에서 그리고 상대를 대상화된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수반한 연대적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 경제적 외형적 통합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통합의 내적 통합에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혜가 필요하다.

주제어: 통일, 사회 문화, 관계, 평화, 방문, 내적 통합
